

의안번호	2210062
의 퇴 인	김용만의원
회 답 일	2025.5.14.
추계번호	25D250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시나리오1) 現 보훈교육연구원 사무공간 활용 시, 총 450억 7,600만원
 - (시나리오2)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공간 임차 시, 총 493억 3,3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한국보훈 정책연구원 설립	시나리오1 (보훈교육 연구원 활용)	인건비	2,154	4,100	4,269	4,445	4,628	19,594	3,919
		경상비·사업비	2,741	5,219	5,434	5,658	5,891	24,943	4,989
		자산취득비	164	153	—	—	—	317	63
		리모델링	222					222	44
		소계	5,281	9,472	9,703	10,103	10,519	45,076	9,015
	시나리오2 (세종시 사무실 임차)	인건비	2,154	4,100	4,269	4,445	4,628	19,594	3,919
		경상비·사업비	2,741	5,219	5,434	5,658	5,891	24,943	4,989
		자산취득비	164	153	—	—	—	317	63
		사무실 임차료	700	945	945	945	945	4,479	896
		소계	5,759	10,417	10,648	11,048	11,464	49,333	9,867

주: 1. 본 추계는 유사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이며, 실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별표 제25호(한국보훈 정책연구원 신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별표 제25호(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권리·의무 및 재산 중 現보훈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재정소요는 연구원의 증원 인력(연구원 필요 인력에서 現 보훈교육연구원 인력을 차감)을 기준으로 추정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의 정책연구원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경상운영비·사업비, 자산취득비로 각각 구분하여 추계함
 - (인건비) 3개 유사 공공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결산 기준 인건비를 참고하여 추정함
 - － 원장(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의 평균 연봉 적용
 - － 상임이사(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평균 연봉 적용
 - － 일반정규직 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 적용
 - (경상운영비·사업비) 5개 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비중”을 참고하여 추정함
 - － 5개 연구기관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 비중”: 22.1%
 - － 5개 연구기관의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 105.2%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여 추정함
- 다만, 정책연구원을 現보훈교육연구원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방안(리모델링 공사비 추계),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설립하는 방안(임차료 추계)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 (시나리오1): 보훈교육연구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 포괄 승계 고려
 - (시나리오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이라는 점 고려
- 개정안에 따라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공공기관)를 각각 적용함¹⁾

1)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2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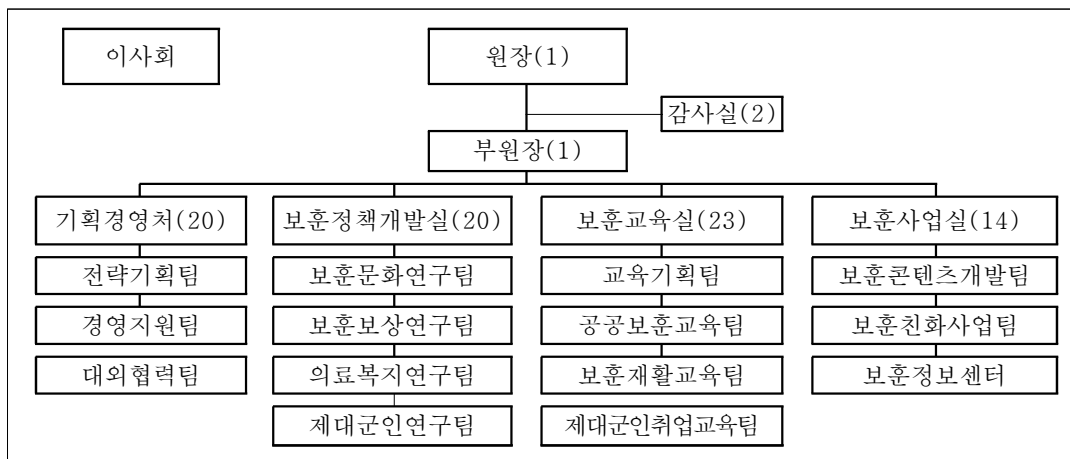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인건비는 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정책연구원의 정원에서 現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소속기구인 “보훈교육연구원”의 정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증원 인력에 대하여 유사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정책연구원의 정원(안)과 조직도(안)는 다음과 같음
 - 연구원의 정원은 81명이고, 임원이 2명, 일반정규직이 71명, 무기계약직이 8명임

[그림 1] 연구원 조직도(안)



주: 상기 정원(안)과 조직도(안)은 잠정적인 구상안이며, 향후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2.9%	3.2%	3.9%	3.8%	3.8%	3.8%	3.8%	3.8%
소비자물가상승률	2.3%	1.9%	2.0%	2.0%	2.0%	2.0%	2.0%	2.0%
1인당 자산취득비	6,727천원	6,855천원	6,992천원	7,132천원	7,274천원	7,420천원	7,568천원	7,720천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설조직인 보훈교육연구원의 정원은 37명이고, 원장(별정직) 1명을 포함한 일반정규직 직원이 29명, 무기계약직 직원이 8명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정책연구원의 증원 인력 인원수는 임원 2명, 일반정규직 직원 42명 등 총 44명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유사 공공기관의 결산 기준 임직원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음

[표 2] 유사 공공기관 임직원 평균(2021~2023년) 연봉

(단위: 명, 천원)

구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 (상임기관장)	인원	1	1	1
	평균 연봉	151,811	166,619	162,489
임원 (상임이사)	인원	—	—	3
	평균 연봉	—	—	136,953
직원 (일반정규직)	인원	70	79	6,465
	평균 연봉	66,399	66,932	64,023

주: 2021~2023년 결산 기준 평균 연봉액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정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증원 인력 44명을 2027년 23명(임원 2명, 직원 21명), 2028년 21명(직원 21명)으로 나눠서 충원한다고 가정하고, 보수와 기관부담금을 합산한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보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임직원 평균 연봉(부원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평균 연봉)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 (기관부담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임원	원장(A)	174	180	187	194	202	937
		부원장(B)	157	163	169	175	182	846
		소계(C=A+B)	331	343	356	369	384	1,783
	직원	인원(D, 명)	21	42	42	42	42	—

	평균 연봉(E)	76.0	78.9	81.9	85.0	88.3	—
	소계(F=D×E)	1,597	3,315	3,441	3,572	3,708	15,633
	계(G=C+F)	1,928	3,659	3,798	3,942	4,092	17,417
기관부담금(H)		226	441	471	503	536	2,177
합계(I=G+H)		2,154	4,100	4,269	4,445	4,628	19,59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경상운영비·사업비

- 경상운영비와 사업비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비중을 참고하여 추계함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예산 기준 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4]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사업비 비중: 2024년 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균
인건비	6,617 (100%)	8,686 (100%)	10,545 (100%)	12,122 (100%)	18,079 (100%)	—
경상운영비	1,605 (24.3%)	2,319 (26.7%)	1,911 (18.1%)	2,653 (21.9%)	3,889 (21.5%)	22.1%
사업비	9,769 (147.6%)	5,195 (59.8%)	15,120 (143.4%)	10,275 (84.8%)	18,610 (102.9%)	105.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정책연구원의 연도별 인건비에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비중(22.1%)과 사업비 비중(105.2%)를 각각 적용하여, 경상운영비와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경상운영비·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A)	2,154	4,100	4,269	4,445	4,628	19,594
경상운영비(B=A×22.1%)	476	906	943	982	1,023	4,330
사업비(C=A×105.2%)	2,265	4,313	4,491	4,676	4,868	20,613
합계(D=B+C)	2,741	5,219	5,434	5,658	5,891	24,94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정책연구원의 증원 인력 44명에 대한 자산취득비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6] 자산취득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원(A)	23	21	—	—	—	44
자산취득비 단가(B, 천원)	7,132	7,274	—	—	—	—
합계(C=A×B)	164	153	—	—	—	31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시나리오1만 해당)

-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무실 리모델링 면적에 2025년 법무부 소관 예산에 편성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입주공사비 단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903㎡이므로, 별도의 신축·증축 없이 리모델링(입주공사)을 통해 사무공간을 재배치한다고 가정
 - 정책연구원의 사무공간 재배치에 필요한 리모델링(입주공사) 면적은 903㎡에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의 입주공사비 단가(2025년 기준 236.3 천원/㎡)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곱하여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정책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다음과 같음

[표 7]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리모델링 면적(A, ㎡)	단가(B, 천원/㎡)	합계(C=A×B)
리모델링 공사비	903	245.8	22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66㎡(원장), 50㎡(부원장), 33㎡(부서장), 17㎡(팀장), 7㎡(직원) 적용

마. 사무실 임차료(시나리오2만 해당)

- 사무실 임차료는 사무실 임대면적(4,579㎡)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단위면적당 임차료와 관리비를 적용하여 추계함
 - (임대면적) 상시고용인원(2027년 60명, 2027년 이후 81명)에 1인당 56.53㎡³⁾를 적용하여, 2027년 3,392㎡, 2028년 이후 4,579㎡로 가정함
 - (임대료와 관리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결산 기준 임대료 단가(월 8,670원/㎡)⁴⁾와 관리비 단가(월 8,521원/㎡)⁵⁾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되, 최근 임차료의 변동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는 다음과 같음

[표 8] 사무공간 임차료(임대료+관리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상시고용인원(A, 명)		60	81	81	81	81	—
임 대 료	면적(B, ㎡)	3,392	4,579	4,579	4,579	4,579	—
	월 임대료(C, 원/㎡)	8,670	8,670	8,670	8,670	8,670	—
	소계(D=B×C×12개월)	353	476	476	476	476	2,259
관 리 비	면적(E, ㎡)	3,392	4,579	4,579	4,579	4,579	—
	월 관리비(F, 원/㎡)	8,521	8,521	8,521	8,521	8,521	—
	소계(G=E×F×12개월)	347	468	468	468	468	2,220
합계(H=D+G)		700	945	945	945	945	4,47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정됨

3)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르면 업무시설인 사무동(사무실, 회의실 등) 부지는 1인당 56.53㎡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집행한 임대료(617,179,200원)를 임대면적(5,932㎡)으로 나누어 산출함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집행한 관리비(606,554,960원)를 임대면적(5,932㎡)으로 나누어 산출함

- (시나리오1) 現 보훈교육연구원 사무공간 활용 시, 총 450억 7,600만원
- (시나리오2)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공간 임차 시, 총 493억 3,300만원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한국보훈 정책연구원 설립	시나리오1 (보훈교육 연구원 활용)	인건비	2,154	4,100	4,269	4,445	4,628	19,594	3,919
		경상비·사업비	2,741	5,219	5,434	5,658	5,891	24,943	4,989
		자산취득비	164	153	—	—	—	317	63
		리모델링	222					222	44
		소계	5,281	9,472	9,703	10,103	10,519	45,076	9,015
	시나리오2 (세종시 사무실 임차)	인건비	2,154	4,100	4,269	4,445	4,628	19,594	3,919
		경상비·사업비	2,741	5,219	5,434	5,658	5,891	24,943	4,989
		자산취득비	164	153	—	—	—	317	63
		사무실 임차료	700	945	945	945	945	4,479	896
		소계	5,759	10,417	10,648	11,048	11,464	49,333	9,867

주: 1. 본 추계는 유사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이며, 실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이며, 실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